

## 요약

독일 메르츠 정부는 공적연금 재정 압박 속에서 세대자본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확정된 조치로는 공적연금 급여 수준 유지, 보험료율 인상, 양육 크레딧 급여 인상, 청소년 장기저축계좌 신설이 있으며, 정년 연령 상향, 기업연금 확충, 리스터연금 개편, 금융투자 문화 전환 촉진 등도 논의 중임. 그러나, 구조적 개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평가가 엇갈림

- 메르츠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로 공적연금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대자본(Generationenkapital)<sup>1)</sup>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되자 개혁 추진을 강화하고 있음
  - 2023년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연방 예산의 약 25%가 공적연금 유지에 투입되고 있고 2040년에는 이 비율이 절반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sup>2)</sup>
  - 이전 신호등 연정(2021~2024년)은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대자본 제도를 도입했지만, 세대자본 제도에 따라 설립된 국부펀드의 수익만으로 보험료율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임<sup>3)</sup>
  - 이러한 평가 속에서 2025년 출범한 메르츠 정부는 단기적으로 급여 삭감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청소년 장기저축계좌 신설과 금융투자 문화 확산 등을 결합한 종합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메르츠 정부가 이미 합의했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확정된 개혁 조치에는 공적연금 급여 수준 유지, 보험료율 인상, 양육 크레딧 급여 인상, 그리고 청소년 장기저축계좌 신설이 포함됨<sup>4)</sup>
  - 우선,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평균소득 대비 48% 이상으로 유지하는 최저보장급여(Haltelinie)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2027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18.6%에서 18.8%로 인상함
  - 또한,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한 여성에게 적용되는 양육 크레딧(Mütterrente)<sup>5)</sup>은 자녀 1인당 월 20유로 인상되어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청소년 장기저축계좌(Frühstart-Rente)는 2026년 1월부터 도입되며,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에게 정부가 매월 10유로를 적립해 장기 투자 경험을 조기에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지연되도록 설계됨<sup>6)</sup>

1) 세대자본은 독일 신호등 연정이 차입 재원을 국부펀드 형태로 적립·운용하여 발생한 투자 수익을 장래 공적연금 보험료율 상승 완화에 활용하는 제도임

2) Financial Times(2025. 8. 25.), "Germany's pensions crisis: can €10 a month change how people invest?"

3) 이승주(2024), 「독일, 공적연금 개혁 추진 동향」,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 보험연구원

4) I AM EXPAT(2025. 8. 7.), "How is Germany planning to reform its ailing pension system?"

5) 양육 크레딧은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의 양육 기여를 반영해 공적연금 산식에서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급여액을 늘려주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됨

6) Wersicherungsburo(2025. 5. 23.), "Germany's New Pension and Healthcare Reform plans for 2025"

- 한편, 메르츠 정부는 확정된 개혁 조치 외에도 정년 연령 상향, 고령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기업연금 확충, 리스터연금 개편, 금융투자 문화 전환 촉진 등 다양한 개혁 과제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음)
  - 첫째, 정년 연령 상향 문제는 기민당(CDU)·기사당(CSU)이 기대수명 연동 또는 70세 상향을 제안하며 본격 논의 되었으나,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둘째, 고령 근로자 인센티브(Aktivrente)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은퇴자의 소득 중 월 2천 유로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지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셋째, 기업연금 확충 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입률 제고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 이는 고용계약 체결 시 근로자는 기업연금에 자동 가입되나 자신의 원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넷째, 사적연금의 핵심인 리스터연금 개편은 원금 보장 의무를 폐지하고 저비용 표준형 상품을 도입하며, 종신연금 수령 요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단순성과 수익성 강화를 지향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금융투자 문화 전환은 청소년 장기저축계좌와 연계해 장기 투자 습관을 조기 형성하려는 정책으로, 이는 독일 성인의 낮은 금융투자 참여율(약 17%)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음

〈표 1〉 독일 메르츠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동향

구분	주요 내용
확정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 급여 수준 유지: 평균소득 대비 48%를 유지하는 하한선을 2031년까지 연장</li> <li>• 보험료율 인상: 2027년부터 보험료율을 18.6% → 18.8%로 인상(근로자·사용자 절반 부담)</li> <li>• 양육 크레딧 인상: 1992년 이전 출생 자녀 양육자 대상, 자녀 1인당 월 20유로 인상(2027년 1월 시행)</li> <li>• 청소년 장기저축계좌 신설: 만 6~18세 대상, 정부가 매월 10유로 적립(2026년 1월 시행), 운용수익 과세 이연</li> </ul>
논의 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년 연령 상향: 기대수명 연동 또는 70세 상향 논의, 기민당·기사당 추진, 사민당 반대</li> <li>• 고령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정년 이후 근로소득 중 월 2천 유로까지 소득세 면제,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 유도</li> <li>• 기업연금 확충: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자동 가입 절차 간소화, 저소득층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li> <li>• 리스터연금 개편: 원금 보장 의무 폐지, 저비용 표준형 상품 도입, 종신연금 수령 요구 완화</li> <li>• 금융투자 문화 전환 촉진: 청소년 장기저축계좌와 연계, 장기 투자 습관 조기 형성, 성인 금융투자 참여율 제고</li> </ul>

자료: I AM EXPAT(2025. 8. 7.); Versicherungsburro(2025. 5. 23.); Support the Guardian(2025. 8. 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정리함

- 이번 개혁은 공적연금의 단기적 급여 안정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구조적 개혁의 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세대자본 제도의 한계를 넘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자본시장과 연계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함
  - 그러나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은 소득대체율 유지, 소폭의 보험료 인상, 청소년 장기저축계좌와 같은 상징적 조치만으로는 재정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국고보조 확대라는 처방에 머물 위험이 크다고 경고함<sup>8)</sup>

7) Support the Guardian(2025. 8. 5.), "Pension age debate threatens to splinter Germany's fragile coalition"; IPE(2025. 6. 24.), "German experts warn active pension alone will not solve labour shortages"; Pinsert Masons(2025. 8. 4.), "Update to German pension legislation sets out comprehensive reform"; Financial Times(2025. 8. 25.), "Germany's pensions crisis: can €10 a month change how people invest?"

8) Financial Times(2025. 6. 17.), "Friedrich Merz's plan will not fix Germany's pensions crunch, warns Bundesbank"